



내용문의	최유진 양성평등연구본부장 ☎ 02-3156-7127
배포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5. 4. 16. (수)
보도시기	2025. 4. 16. (수) 12:00
※ 매수 : 총 9쪽(본문 4쪽, 붙임 5쪽 포함)	

## 저출생 · 고령화 시대, 가족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도 달라져야

다양한 가족 형태나 가치에 맞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개원 42주년을 맞아 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간 가족정책의 성과를 진단하여 저출생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 · 저출생 연구본부 연구자 3인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 김은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세대 내에서 성별 생애전망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청년 여성들은 가족형성보다 노동경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생애과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남녀 모두의 동의도가 매우 높다” 라고 설명했다.

※ ‘일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동의 비율  
(2019) 남 44.2%, 여 69.3% → (2025) 남 63.5%, 여 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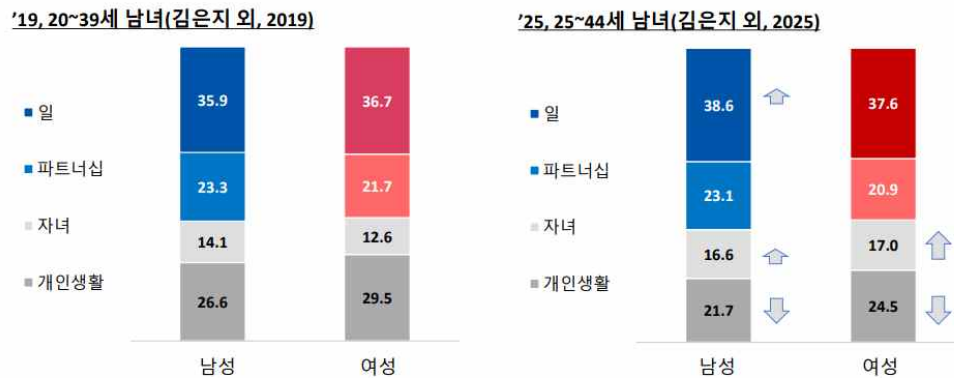
- 김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세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지향성은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동의와 특히 남성의 가족참여 지향성이 상승하였다” 고 분석하며, “남성의 가족역할 지원을 통해 ‘전통적 가족’ 에서 ‘새로운 가족’ 으로 가족정책의 균형점을 이동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청년기의 삶에서 중요성 부여 정도

(2019) 남녀 동일, 일>개인생활>파트너십>자녀

(2025) 남, 일>파트너십>개인생활>자녀; 여, 일>개인생활>파트너십>자녀



출처 : 생애전망 및 가족·노동역할 실태조사

<그림 1> 청년기의 삶에서 중요성 부여 영역(총점 100점)

※ ‘이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성들도 시간을 내야’ 동의 비율 (2025) 남 68.8%, 여 83.9%

- 정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일차적 책임을 전제하고 있지만,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가족돌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고 진단하였다.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기능 수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족 돌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었음.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기능수행 : ‘잘 수행하지 못함’ 비율 - 여가 49.6%, 정서적지지 42.1%, 건강관리 37.6%의 순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대응 :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23.5%;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돌봄 과부하를 경험하고 있다 73.9%; 가족 외 돌봐줄 사람이 없다 50.9%

- 정 선임연구위원은 각 가족마다 상이하며, 같은 가족 안에서도 계속 해서 변화하는 돌봄 요구를 사회서비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 △ 가족돌봄자의 소진 예방 △ 가족구성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 등을 제안했다.

- 송효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비혼의 증가, 가족 유동성의 증대 등 가족구조와 부양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부양체계에 있어 법률혼 및 혈연·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낡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 형태나 가치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송 선임연구위원은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 및 과제로 △ 상호 부양을 선택한 당사자들을 위한 부양 규정 정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근거 및 우선순위의 명확화 △ 친족 부양 범위 축소와 재구조화 △ 개인의 생존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적 부양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 김종숙 원장은 “변화하는 가족정책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도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수행해 왔던 돌봄이나 부양을 분담하고 보완해 줄 사회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 “이번 세미나가 더 유연하고 확장적인 가족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7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지평 확대”를 주제로 개원 4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이래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양성평등·가족정책 싱크탱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발표 주요 내용

## 붙임 1. 행사 개요

- ☐ 주 제 :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지평 확대
- ☐ 일 시 : 2025. 4. 17.(목) 14:00-17:00
-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 주 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참석자 : 정부 공무원, 국제기구, 학계,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전문가 및 주요 관계자 약 100명
-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4:00-14:20	개회식	사회 : <b>최인희</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개회사 : <b>김종숙</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b>이인선</b>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b>신영숙</b>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b>신동천</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4:20-15:20	발표	<b>생애 전망의 유연성 증대와 가족정책의 미래 전망</b>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다양한 가족의 돌봄 요구와 가족정책 의제의 확장</b>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변화하는 가족의 부양 의제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과제</b>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15:30	휴식	
15:30-16:40	토론	좌장 : <b>신선미</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b>문소영</b> (중앙일보S 문화전문기자) <b>유지영</b>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b>전경근</b>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가족법학회장) <b>정순돌</b>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최성지</b>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이상 가나다순
16:40-17:00	종합 토론 및 폐회	

## 붙임 2. 발표 주요내용

### 생애 전망의 유연성 증대와 가족정책의 미래 전망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청년세대 내에서 성별 생애전망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여성들이 가족형성보다 노동경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청년기의 생애과업 비중을 조정하였으며, 남녀 모두 가족형성 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30대 초반의 유배우율과 고용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남성은 유배우 취업상태, 여성은 유배우 비취업 상태가 보편적이었지만, 2024년에는 남녀 모두 무배우 취업상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30대 여성들의 고용율 증가가 부각되며, 50대까지 모든 연령대 여성들의 고용율이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둘째, 현재 20대 후반-40대 초반인 세대의 청년기 생애과업 비중 및 생애전망을 확인해 보면, 여성들은 가족형성보다 노동경력의 과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자녀가 생길 경우 비취업을 원하는 여성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5년 전 20대 초반-30대 후반에 실시했던 유사 조사에 비해서는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자녀의 중요성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셋째, 성역할 가치관을 확인해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남성의 가족참여에 대한 동의도가 남녀 모두 5년전에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약 80%, 남성의 약 65%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성의 가족참여에 동의하고 있었음.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족 균형점으로서의 이동이 필요한 시점임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표문은 모든 일하는 부모의 시간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 미취학부터 취학연령까지 돌봄의 양과 질 보장, 아동 전연령대에 걸친 아동수당 제공이라는 가족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청년세대 생애전망과 합치하지 않고 제도 목적과 메시지에 혼선을 주는 일부 현금수당체계는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음.

##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요구와 가족정책 의제의 확장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노인·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 요구에 대응해 왔음. 최근에는 가족돌봄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사업 등이 추가되었음. 즉 사회서비스는 가족이 수행해왔던 돌봄 기능을 분담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회서비스는 가족의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일차적인 돌봄책임을 전제로 제공되고 있음.

비혼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유형의 변화, 가족관계의 축소(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 가족의 역할에 대해 달라진 인식과 기대(가족부양 의식의 약화) 등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가족돌봄이 지속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또한 개별 가족구성원이 사회속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 요구도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그리고 계속 변할 것으로 보임. 즉 각 가족마다 상이하며, 같은 가족 안에서도 계속해서 바뀌는 돌봄 요구를 어떻게 사회서비스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해짐. 또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가족돌봄자가 가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양가적 인식을 고려할 때 돌보려는 의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해야 함. 더 이상 가족 돌봄이 당연시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 돌봄을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발표문에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음.

## 변화하는 가족의 부양 의제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과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양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 부양 체계와 사적 부양 체계로 구분되는데, 우리 부양 제도는 사적 부양(민법상 부양)을 원칙(우선)으로 하고 공적 부양이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가족변화 및 가족부양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대응이 이루어져 왔으나(공적 부양 강화, 부양의무자제도 단계적 폐지), 사적 부양제도는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정비된 바 없이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우리 민법은 민법 제7장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개인에게 부담 지우고 있음. 한편, 일반 친족 부양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를 ‘보호 양육할’ 친권의 내용(민법 제913조)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도출될 뿐이며, 배우자 간 부양의무는 친족 부양이 아닌, 민법의 배우자 간 의무 규정(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임. 우리의 민법상 부양제도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된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기 적절하지 않았고, 종래의 법리에 의하면 정작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부양에는 민법 제7장은 적용의 여지가 없어 효용이 떨어지게 되었음. 나아가 가족 다양성의 증대에 따라 개인이 선택하고 구성하는 관계에서의 부양에 대한 대응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본 발제에서는 가족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부양제도의 한계, 특히 사적 부양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변화하는 가족부양 의제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음.

첫째, 사적 부양 체계는 혈연·신분 기반의 부양의무를 완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에 의한 상호 부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함. 그리고 가족다양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법률혼관계 뿐 아니라 대안적 관계 구성과 선택을 존중하여 부양 체계에 포괄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둘째, 부양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구상 등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과의 관계, 구상 관계 그리고 가족다양성·유동성의 증대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부양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행사자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현행 친족 간 부양의무 범위를 가족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가족관계와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부양청구권 제한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예컨대 상속에서의 구하라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공적 부양제도를 강화하여 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야 함. 개인의 안전망이 공적 부양의 강화를 통해 보장되고, 공적 체계로 세세히 닿을 수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개인 간 부양과 연대가 스며들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양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토대와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가족관계와 사적 부양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조화로우실 수 있을 것임.